

식량 확보는 생존 문제다.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 본부장 / 상무 유병규

세계 곡물 가격이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어 국내 경제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세계 곡물 가격 상승의 첫 번째 원인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곡물 수요 증가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과 인도의 경우 경제가 성장하면서 곡물 수요 직접적으로 늘어날 뿐만 아니라 육류 소비 증가에 의한 간접 수요도 증대하고 있다. 환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옥수수 등을 활용한 바이오 연료 사용이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도 곡물 가격을 높이는 주요한 요인이다. 지구 온난화 등에 따른 이상 기후 현상도 곡물 작황을 감소시켜 곡물가를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요 곡물시장으로 국제 투기 자금이 몰리는 것도 큰 문제다. 미국 경기 침체 등으로 세계 경제가 불안해지자 곡물 시장으로 국제 투기 자금이 대거 유입되어 세계 곡물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자원민주주의가 확산되면서 곡물 공급의 악화를 유발하여 곡물가의 인플레이 기대 심리를 높이고 있다. 중국은 밀, 쌀, 옥수수에 대해 수출 쿼터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최고 25%의 수출 관세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러시아는 주변국에 대한 밀 금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밀 수출 관세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우크라이나와 아르헨티나 등 주요 곡물 수출 국가들 또한 곡물 수출 쿼터제를 도입하거나, 수출 관세를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다.

곡물 가격 상승은 무엇보다 국내 물가 상승세 및 식량 수급 불안을 가중시킨다. 주식인 쌀을 제외한 보리, 밀, 콩, 옥수수의 국내 자급률은 2006년 기준으로 각각 46.5%, 0.2%, 0.8%, 13.6%에 불과하다. 한국의 취약한 식량 수급 구조에 비춰볼 때 세계 곡물 가격 상승은 그대로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를 위축시킴으로써 내수 부진을 심화시키게 된다. 더욱이 세계 곡물의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면 국내 식량의 원활한 확보도 힘들어질 것이다. 특히나 곡물 가격 급등은 북한의 식량난을 더욱 부채질하고 탈북 현상을 가속화시킬 우려를 높여준다. 탈북자가 늘면 북한의 인권 문제 등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어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도 확대된

다. 곡물 가격 상승 현상이 추세적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세계적으로도 기아 현상이 확산되고 난민이 증가하게 되며, 자원민주주의가 견고해져 국지적인 분쟁이 발생하여 세계 경제 여건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최근의 곡물 가격 상승이 수요 증가와 공급 부족에서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볼 때 단기적인 대응책보다는 중장기적인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우선, 식량 안전 보장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고 식량자립도를 높이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미국 농림부는 1999년 '식량안보행동계획'을 수립하고 경제 안보와 연결시켜 식량 안전 보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도 농림수산성이 '21세기 신농정 2006'을 수립하여 국가 차원의 식량 안전 보장 전략을 적극 실현하고 있는 중이다. 한국 역시 식량 문제를 단순한 수요 확보 차원에서 대응을 하기보다는 전체 국가 경제 사회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식량 안전 보장 관점에서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국내 농업의 적극적인 국제화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만주, 연해주 등 주변국 미개발 영토에 대한 플랜테이션 협력 강화를 통해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더 나아가 대규모 농업 펀드 등을 조성하여 세계 각지의 대규모 플랜테이션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곡물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투자 수익 또한 창출해야 할 것이다.

농업 분야에 대한 북한과의 전략적 협력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농업 근대화를 지원하는 한편 북한의 농경지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남북한의 식량 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북한과의 농업 협력은 북한과 한국의 식량 안보를 강화해 주며, 북한 사회를 안정화시켜 한반도 정세 불안을 완화시켜 줄 것이다. 식량 확보는 생존의 문제이다. 지금은 먼 장래를 내다보며 한반도의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 구상이 시급한 시점이다.